

내일 퇴임하는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찾아오는 농산어촌 교육 모델 창출 뿌듯”

전남교육을 위해 50년동안 외길을 걸어온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오는 22일 이임식을 끝으로 교육청을 떠난다.

1958년 해남 육천초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김 교육감은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친 뒤 2001년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실력 전남 구현’을 위해 헌신했고, 떠나는 농어촌에서 찾아오는 농어촌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20여년을 근무하고 장학사, 장학관, 교육국장 등으로 재직한 15년의 전문직 생활이 민선 교육감으로 전남교육의 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

특히 김 교육감이 직접 제안한 전원학교 등 각종 농산어촌 학교의 발전 모델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모범 교육 사례로 채택돼 전국 교육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은 교육정책은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조례, 2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 농어촌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으로 빛이 났다.



■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학력
▲광주고 졸업 ▲광주사범대 졸업 ▲조선대 문리대 졸업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순천대 명예교육학박사
약력
▲광주제일고 교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중등교과과장·중등교육국장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이사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제 14대 (민선 4대) 전남도교육감 취임(2001.10.25) ▲제 15대 (민선 5대) 전남도교육감 취임(2005.10.25)

이 넘는 정원이 줄게 된다. 이 것을 막아내야 하는 데 자리를 비우게 돼 마음 아프다. 그래도 도 교육청 간부들이 잘 해내리라 믿는다.

- 재임 기간에 기억에 남는 교육 사업은.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목표로 만들어 낸 ‘JLP’(Jeollanamdo Language Program) 프로그램이다. 교육감 부임 직후 시작한 것인데,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고, 전남

도내 영어 교사들의 원어민화 교육에 집중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 전남 학생의 영어 수준을 높이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또, 전원학교 육성 사업도 기억에 남는다.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를 현지 여건에 맞게 첨단화 시설로 재 무장해 경쟁력을 높였다. 교과부에서도 농산어촌 교육의 성공모델로 극찬한 프로그램이다.

-낙후된 전남 교육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일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 정보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이유는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전남인터넷 교육방송을 개통했고, 2005년에는 전남교육정보원을 설립해 사이버 교육의 틀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완성한 곡성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과 도내 220여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 신축, 전남학생교육원 시설 현대화, 전남외국어 교육연수관 및 전남학생

영어교사 원어민화 ‘실력 전남’ 구현

지역민 여론 긍정적일 땐 3선 도전

교육문화회관 설립 등도 전남 교육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고 본다.

이 밖에도 단선 유치원 확대, 교실환경 최적화 3개년 사업 등이 기억에 남는 교육 인프라 사업들이다.

-전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책 중 대표적 성공 사례는.

▲전국 최초로 도 단위 학력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부임 초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던 전남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지난 5년간 수능성적만 보더라도 전국 23개 시·군·구 중 장성군이 전국 1위, 곡성군이 수능 영역별 1~4등급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수능성적 상승률에서도 곡성군이 전국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한 농어촌 지역 중심고교 육성사업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롤 모델이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 수능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62명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향후 계획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교육이다.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성공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3선 도전을 권유하는 여론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은 현직에 있어 출마 여부에 대한 말을 아껴왔고, 고민도 많이 했다. 이제 퇴임하는 만큼 지역민의 여론이 긍정적이라면 3선에 도전해 보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육아·노인 일자리 동시 해결” “지원대상·방법 모호”

‘가정도우미 조례’ 논란 속 보류

시의회 내달 재상정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가정복지도우미 제도’ 도입이 미뤄졌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0일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지원 대상·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돼 의결 보류했다.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위키맘 지원 사업 등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출산·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20~40대 여성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5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가정 도우미’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가정복지도우미로 선발·교육하고, 이들이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

와 가사를 돌보는 제도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 지원 제도를 통합, ‘인력은행’ 등을 통해 육아·교육·가사노동 등 인력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등이 모호하고 자칫 또 하나의 변형된 가정 지원 제도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보다 폭넓게 의견을 듣는 뒤 다음 회기에 재심 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됐으며,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열린 예정인 제184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혜령 의원은 “저출산 대책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일부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지원

세금 감면 등 ‘조례안’ 의결

광주시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숙 의원(민주·서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이를 심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 세금 감면,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은 물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숙 의원은 “취약 계층의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북·미 내주 접촉... 양자대화 물꼬 트일까

미국과 북한이 내주 비공식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교착상태인 북핵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의 리 군 미국국장은 오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참석에 앞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의 북핵 담당 관리들과 접촉, 북핵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국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 협력대화를 전후해 북·미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이 내주 비공식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교착상태인 북핵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의 리 군 미국국장은 오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참석에 앞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의 북핵 담당 관리들과 접촉, 북핵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국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 협력대화를 전후해 북·미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리 국장의 방미 이후 공식적인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한의 명시적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